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24
----------	------

발의연월일 : 2025. 1. 8.

발 의 자 : 이종배 · 김성원 · 성일종
박덕흠 · 이종욱 · 김예지
김상욱 · 김위상 · 엄태영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도 확대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경우 조세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기업도시 입주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해당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기업도시 지역인재”라 한다)을 입주기업의 채용규모, 해당 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②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범위는 입주기업의 채용규모,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기업도시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4조의2(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기업도시 입주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해당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기업도시 지역인재”라 한다)을 입주기업의 채용규모, 해당 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u></p> <p><u>②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의</u></p>

범위는 입주기업의 채용규모,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기업도시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